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정책실: 723-5051)
 제 목 정치권과 방송사 간의 TV토론 참여범위 합의사항에 대한 입장
 날 짜 1997. 10. 1. (총 1쪽)

보 도 자 료

부정부패 정경유착 합리화 시키는 정부의 사면조치

경제인 특별사면·복권에 대한 논평

.....

각종 부정부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제인에 대한 정부의 특별사면·복권 발표는 '경제회생'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그 배경과 의도에 강한 의문이 든다.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은 자칫 남용할시 사법정의와 국가기강을 문란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최소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충분한 국민적 동의에 기초해야 한다. 이런점에서 이번의 사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다.

비리 재벌에 대한 단죄는 뿌리깊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관행과 구조를 청산하는 현 정부의 '역사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전개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뿌리뽑힌 상황도 아니며, 이를 강력히 근절시킬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채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먼저 사면·복권을 하겠다는 것은 정경유착과 부패를 이대로 방관하겠다는 태도와 하등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경제회생'을 위해서라면 부패도 정경유착도 면죄될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비리 경제인들이 과오를 반성하고 만족할만한 방지책을 스스로 내놓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잔형면제'도 아닌 '형 선고의 실효'를 의미하는 '사면'은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선심공세라 보지 않을수 없다.

더불어 의혹과 우려를 거둘수 없는 것은 이번의 사면조치가 전·노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의 전주곡으로서 '민심 총격흡수'의 의도가 보인다는 점이다. 만에하나라도 이번 사면조치가 전·노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을 염두한 것이라면 정부는 당장 그 의도를 포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전·노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은 과거청산의 제반 조치가 완성된 이후 국민의 이해와 동의하에 비로서 이루어 질 수 있는 문제임을 우리는 누차 지적해 왔다. 김대통령이 임기내에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에 집착한다면 이는 당장의 '선거중립'을 포기하는 것이며, 김대통령의 통치기록에 중대한 오점을 하나 더 남기는 결과가 될 것이다. 김대통령과 정부의 신중한 판단과 행동을 촉구한다.